

북한의 ‘전쟁 비즈니스’와 중국의 선택

조 민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0-46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노렸다. 세습 후계자의 군권 장악과 리더십 과시를 위한 도발이라는 지적은 이미 상식화된 말이다. 그와 함께 대미 협상용이거나 대남 협박 측면에서 도발 의도 파악도 가능하다. 즉, 북방한계선(NLL)의 분쟁수역화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대미 협상용이거나,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요하는 협박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 금번 연평도 도발은 중국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은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넘어 중국을 상대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 비즈니스(war business)’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일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물론 북·중 밀착은 한·미 동맹의 반작용이다. 장기간의 대북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중국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은 완충지역의 존속과 동해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서 탐탁찮지만 ‘말썽꾸러기’ 북한을 떠안아야 했다. 이처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북·중 밀착은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그러나 북·중 혈맹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 얻은 것은 별로 없다. 김정일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당시 대북원조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중국 측의 미지근한 반응에 발길을 돌렸는데, 8월 창춘에서의 회담

후 지금까지도 중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아내지 못했다. 9월 말 이래 후계 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중국은 ‘화끈한’ 지원 모션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대국 구소련도 믿지 않았고, 과거의 중국이나 지금의 중국도 믿지 않는다. 중국 또한 아무리 정상회담을 연거푸 두 번이나 가졌다 하더라도 북한을 무조건 지원할 생각이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저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중국이 대폭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 위기와 한국, 그리고 중국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크게 흔들어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 또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을 억제시켜야 할까? 한반도 발 동북아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으로 최소 21조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쏘나타 자동차 100만 대, 30만 톤 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로 추산했다. 그런데 북한의 대포 한 방으로 엄청난 코리아 프리미엄은 한꺼번에 날아갔고,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한국의 경제는 이처럼 안보위기에 속수무책일 만큼 취약한 구조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북한 장사포의 사정권 내에 있는 ‘서울’과 ‘경제’가 볼모가 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실효적인 군사적 옵션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사전에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이 차선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안함 폭침의 ‘피의 희생’ 이후 그러한 교훈을 전혀 체득하지 못한 것 같다. ‘실패국가’ 북한에 대한 ‘정책의 실패’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로 당장 우리에게 얻을 것은 없다. 금번 포격으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협상 국면이 회복되어 남한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면 받되, 아니면 남한을 계속 흔들면서 2년 후 다음 정부와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듯하다. 매번 북한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우리가 취할 대북 군사적 레버리지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곤혹스런 현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반드시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일본의 군비 확장을 부추긴다. 오로지 경제성장에만 몰입하려는 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상황의 발생 자체를 적극 회피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외전략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동북아의 긴장과 위기 조성이 바로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주지시켰다. 중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충분히 간파했다면,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간 당 고위층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제의하면서, 김정일의 청구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에블로(the USS Pueblo)호 나포와 김일성의 대소(對蘇) 협상 전략

북한은 과거 냉전시기,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 조성으로 한몫 크게 챙긴 적이 있다. 푸에블로호 나포로 한반도의 긴장을 바짝 고조시킨 가운데 대소 협상을 통해 대대적인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끌어냈다. 여기서 미국 정보함 나포로 '전쟁 장사'(war mongering)의 수완을 특특히 발휘했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최근 우드로 윌슨 센터의 '냉전사 연구'는 러시아 측 사료 검토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대국 소련을 다뤘던 모습과 함께 한반도 위기 사태의 전말을 비교적 소상히 밝혀 주목을 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집권 후 조·소관계가 회복되면서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소련의 대북지원이 조금씩 증대했다. 1966년, 북한은 소련에 발전소, 금속가공공장, 알루미늄 공장, 암모늄 공장 건설 지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원유저장시설도 없는 형편에 석유정제공장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구나 북한은 모스크바 근처에 공산품 공장을 세워 대외선전용인 제품을 소련이 구매해줄 것까지 제의했다. 당시 중·소 분쟁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가당찮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함정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은 바로 이 시기에 터졌다.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등 3대의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고, 오키나와에 있던 공군기들도 남한으로 전진 배치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 뒤에 소련의 방조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모험적인 도발에 격노한 측은 극동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장과 대립을 바라지 않았던 소련의 브레즈네프였다. 브레즈네프는 즉각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소련이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마침 존슨은 국내의 반전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 구정(舊正 Tet)공세(1968.1.30)의 충격에 휩싸였던 상황이라 브레즈네프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엔터프라이즈 항모를 동해상에서 철수시키자, 곧 판문점에서 북·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김일성은 푸에블로호 나포로 조·소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61.7.6, 모스크바)과 조·소 군사협정(1965.5.31, 모스크바)을 시험대에 올렸다. 브레즈네프는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렀으나, 김일성은 응하지 않았고 대신 김창봉(1966.6 부수상, 1967.12 민족보위상 겸임, 1968년 12월 숙청)을 보냈다. 브레즈네프는 김창봉과의 장시간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긴장 완화와 대미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무기체계의 무상 원조와 함께 경제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였다. 소련은 북한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캠프의 리더로서 국제주의적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을 달래기 위해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해에 북한은 소련의 원조에 의해 시설용량 200만 kW의 북창화력발전소 건설의 첫 삽을 떴고, 몇 단계 확장공사를 거쳐 오늘날 북한 최대의 발전소를 완공하였다. 또한 그 시기 북창 알루미늄 공장 건설에다, '80년대 중반까지 최신형 전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물론 승조원 82명은 11개월 만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이로써 한반도를 바짝 긴장시켰던 위기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한반도 위기 조성의 김정일의 대중(對中) 협상 전략

지난 5월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태로 곤경에 처한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지목을 거부하고 북한을 안는 한편, 이를 계기로 북한의 대중 의존을 확고히 할 심산이었다. 이에 중국은 “전략적 소통 강화, 내정 문제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는데, 내정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많은 추측을 낳았다. 사실 ‘내정’ 문제에 대한 협의는 아무리 혈맹과 우의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자주’와 ‘주체’를 내세우는 북한에게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안보, 경제, 후계문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무척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김정일은 4년 만의 방중에서 북한 사정을 뻔히 아는 중국에게 대대적인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얻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과 담판을 짓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김정일은 최신행 전투기 수 십대, 약 300억 달러 상당의 경협 지원, 매년 원유 100만 톤과 쌀 100만 톤 긴급지원 등의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중국이 제안한 협력 사안에는 원조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말 뿐이었고, 더욱이 경제무역 분야에는 상호주의 성격마저 드러냈다. 또한 중국 측은 김정일에게 13억 중국 인민도 굶지 않는데 2천만 주민을 못 먹여 살리느냐며 힐난했다고 한다. 여기에도 원자바오 총리는 개혁·개방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제의하면서도 결국 김정일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5월의 만남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8월의 정상회담에서조차 후진타오 주석은 후계자 구축을 위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 김정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이제 대중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중국이 순수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중국의 말이 북한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여겨질 수 있다. 중국은 한 번이라도 북한을 ‘통 크게’ 지원한 적이 없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만주 지역 주민 수 만 명이 강을 넘어 북한 땅에 왔을 때 북한은 성의껏 도왔는데, 중국은 ‘고난의 행군’ 3년 시기 굶주리는 북한을 외면했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더욱이 지금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북한을 중국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중 조약(1961.7.11)이나 혈맹 회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호락호락할 북한이 아니다.

남한을 때려 한반도 위기 국면을 조성하여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면 누가 초조해 하겠는가? 한국? 물론 한국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달랠 입장이 아니다. 정작 김정일을 달래야 할 측은 바로 중국이다. 1968년 당시 27세의 김정일은 김일성이 한반도의 긴장과 극한적 위기 조성으

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대국을 다루면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한 몫 얻어내는 솜씨를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27세의 세습 후계자에게 한국과 세계대국 중국을 다루는 솜씨를 전수시키는 중이다. 그때 한반도 동해에서 소련을 상대로 ‘전쟁 장사’를 벌였다면, 지금은 서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전쟁 비즈니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택이 기대된다.

<참고>

* Sergey S. Radchenko,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Series #47,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On the current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on the struggle of the CPSU for the un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Excerpt from a speech by Leonard Brezhnev at the April(1968) CC CPSU Plenum. 04/09/1968. Source: Russian State Archive of Recent History(RGANI), translated for CWIHP by Sergey S. Radchenko.